농업의 지속가능성, ‘쌀’과 ‘소득’에 있다

2016. 01. 25 | 장경호_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
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겸임교수 / 새사연 이사 | jkh1223@chol.com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들어가며

지난 20년간 한국의 농업정책은 큰 틀에서 보자면 변화가 없었다. 대외적으로는 농산물 시장개방을 확대하는 정책이 일종의 상수처럼 작용하였고, 대내적으로는 시장개방의 확대에 편승하여 농업을 구조조정 하는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었다. 시장개방과 구조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농업정책의 골격은 김영삼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시기별로 세부 내용에서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그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농정의 기조를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농업과 농민에 미치는 영향력의 작동방식을 보면 구조조정 보다는 시장개방이 더 우선순위의 규정력을 갖고 있다. 즉, 우선적으로는 시장개방의 확대에 따라 농업과 농민에 미치는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며, 구조조정은 이와 같은 대외적 환경변화에 수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대내적 농업정책인 것이다. 초국적 자본과 국내 재벌·대기업 그리고 정부(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지점이 시장개방이며, 이것이 지금까지 농업을 포함한 경제정책의 일관된 상수로 작용했다. 그리고 농업의 구조조정은 정부에 의해 선택받은 소수의 정예 농가를 대상으로 경쟁력과 규모화 및 시설집약화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선택받지 못한 대다수의 중소규모 가족농은 퇴출의 대상이 되어 몰락의 길로 강제로 유도되었다. 다만 몰락의 속도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직접지불제도, 제한적인 가격안정 정책, 각종 농가부담 경감 대책 등이 연착륙의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쌀시장을 관세화로 전면 개방함으로써 쌀도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졌다. 그동안 유일하게 수입자유화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쌀마저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농산물 시장은 100%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졌다. 여기에 2015년에는 중국, 호주, 캐나다 등 농산물수출 강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도 잇따라 발효되거나 비준됨으로써 시장개방의 폭과 속도가 훨씬 더 가속화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신규 가입을 사실상 내부적으로 결정한 상태에 있고, 조만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농업 구조조정을 통한 집중 지원의 대상을 소수의 개별 전업농가로부터 점차 더욱 규모화된 극소수의 기업농으로 옮겨가면서, 수출농업과 ICT 융복합 스마트팜, 자본집약적인 시설농업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식량자급률, 농가소득보전, 농산물가격안정 등과 같이 농업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할 영역은 갈수록 그 중요성이 약화되고 있다.

시장개방과 구조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농업정책하에서 농업 · 농촌 · 농민은 지속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미 현실에서 증명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농업과 농민의 지속가능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 글은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농업과 먹거리, 지속 불가능한 현실

농업과 농민의 지속가능성을 찾기 위한 첫 걸음은 역설적이지만 현재의 농업과 먹거리가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여 년에 걸친 시장개방과 구조조정의 결과는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나듯이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의 급격한 몰락이다. 1990년대 초반 약 7백만 명이 넘던 농가인구가 최근 약 26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주류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듯이 경제성장에 따른 농가인구의 감소효과를 고려하더라도 20년 사이에 농가인구의 60%가 줄어드는 급격한 몰락은 다른 나라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김대중 · 노무현 정부 당시 연착륙을 위한 보완대책이 다소 강화되면서 몰락의 속도가 조금 늦추어졌지만 이명박 · 박근혜 정부 이후 다시금 그 몰락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농가인구의 양적인 몰락과 더불어 60대 이상 농민이 전체 농민의 약 절반 가까이 되는 농가의 노령화는 농업노동력의 질적인 붕괴마저도 초래하고 있다. 최근 농업노동력에서 이주 노동자 및 이주 여성농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 정도까지 빠르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게 늘어난 현상은 농업노동력의 양적 · 질적 붕괴가 초래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것은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시장개방 및 구조조정을 강압적으로 추진한 농업정책이 초래한 인위적인 참사로 보아야 한다. 특히 수입 농산물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키운다는 명목하에 소수 정예농가 육성에 자원과 예산 및 제도를 집중적으로 지원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농업정책에서 소외된 대다수의 중소가족농은 빠르게 몰락할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 도시 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는 농촌의 빈곤화 및 양극화는 그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 농민층 가운데 절대빈곤층에 해당하는 빈곤농가의 비율이 약 24% 수준으로 도시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 소득에 비해 약 5배 정도 높은데 비해, 농가소득은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 소득에 비해 약 11배 정도 더 높을 만큼 양극화의 진전도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은 소수의 전업농과 기업농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위 농민층 가운데 억대 농부로 대표되는 부자 농민들도 약간 증가하고 있지만 그것은 대다수 농가의 퇴출 및 빈곤화라는 희생위에 얻어진 성과에 불과하다. 게다가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한 전업농 및 기업농이라 할지라도 수입 농산물에 대응하여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춘 농가는 극소수에 불과할 정도이다. 그나마 이와 같은 극소수의 농가들이 갖는 경쟁력이란 것도 한편으로는 이주 노동자에 의한 저임금과 일반화되지 않은 틈새시장에서의 한시적인 비교우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의 토대 자체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시장개방 및 구조조정에 따른 농업과 농민의 급격한 몰락은 당연하게도 식량자급률의 급속한 하락으로 이어졌다. 1990년대 초반 약 45% 수준이었던 식량자급률이 최근 약 22~23% 수준으로 반 토막이 났다. 정부가 아무리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더라도 시장개방 및 구조조정의 농업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듯이 식량자급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식량자급률의 하락은 또한 우리 밥상에서 소위 '글로벌푸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글로벌푸드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에 비례하여 밥상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과 위험도 높아졌다. 유전자조작농산물(GMO), 대규모 화학농업과 공장식 축산, 장기간 · 장거리 유통에 따른 수확후처리에 투입되는 다양한 종류의 화학적 처리기술, 패스트푸드 및 인스턴트 식품에 투입되는 각종의 합성화학첨가물 등은 먹거리 위험을 초래하는 모든 요소들을 포괄하고 있는 글로벌푸드이기 때문이다. 글로벌푸드의 확대가 먹거리의 위험을 구조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 장치만으로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또한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수록, 까다로운 안전 기준에 적합할수록 해당 먹거리의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한 먹거리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는 현실은 이와 같은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라 먹는 것이 사람을 차별하는 먹거리 양극화 현상이 확대되고, 이는 건강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가난한 계층일수록 아토피, 비만, 당뇨, 고혈압 등과 같은 식원성(食原性) 질병이 높게 나타난다는 국내외 수많은 보고서들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개방과 구조조정이 계속 확대되는 것과 반비례하여 농업과 농민 그리고 먹거리는 더욱 지속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농업과 농민 그리고 먹거리의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실마리는 시장개방의 속도를 멈추는 것에서, 그리고 농업구조조정 대신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을 마련하는 것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시장개방의 수레바퀴를 멈춰라

1) 시장개방의 수레바퀴

유럽이 공동농업정책(CAP)을 통해 식량의 자급을 이루면서 1970년대에는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에서도 농산물의 과잉생산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고, 미국과 유럽의 농업자본 이윤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하였다. 하나는 국내적인 농업구조조정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해외시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다소 시차는 있지만 미국과 유럽이 시행한 농업구조조정의 핵심은 생산면적과 생산량을 감축하는 것이었고, 이로 인해 손실을 보는 생산자에게 직접지불제도로 보상을 해주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국내 농업조정만으로는 과잉 농산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결국 이들은 새로운 해외시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게 되었다. 미국과 유럽은 과잉 농산물을 위한 해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1986년 우르과이라운드(UR)를 시작하였고, 1993년 12월 UR 농산물협상이 타결된데 이어, 1995년 1월 1일부터 UR/WTO 체제가 출범하였다. UR/WTO 체제는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모든 나라들은 농산물 자유무역체제로 편입시켰다. 이로서 농산물 자유무역이 세계화되었다.

그런데 UR 농업협정문에 이어 농산물 자유무역 및 시장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추

가적인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해 시작된 두 번째 다자간 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이 10년 이상 장기 표류하는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WTO를 통한 농산물 자유무역의 확대가 장벽에 부딪히자 농산물 수출국 및 초국적 농식품 자본은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였다. 미국과 EU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다자간 협정을 대신하여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농산물 자유무역을 확장시켜 왔다. 글로벌푸드시스템을 지배하고 있는 초국적 농식품 자본은 미국 및 EU 정부를 내세워 농산물 자유무역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및 환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등과 같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확장되고 있다.

UR/WTO 체제는 예외 없는 관세화를 기본으로 하였다. 즉, 관세를 제외한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거나 감축하는 방식으로 모든 회원국들이 농산물 수입자유화를 이루도록 강제하였다. 이에 따라 UR/WTO 체제에서 관세를 제외한 모든 국경 보호 장벽이 철폐되거나 대폭 감축되었다. 그리고 FTA/TPP 등과 같은 자유무역협정은 유일한 보호 장벽으로 남아 있는 관세마저도 철폐하거나 대폭 감축하도록 만들어 농산물의 자유무역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UR에서는 건드리지 않았던 수입위생검역조건(SPS)까지도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 보다는 수출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농산물의 자유무역 및 시장개방 확대는 WTO를 통한 다자간 협정과 FTA를 통한 양자간 협정을 두 축으로 하여 진행되어 왔다.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시장개방의 수레바퀴를 멈출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보기로 하자.

2) WTO/DDA 수레바퀴는 멈추고 있다.

UR/WTO 농업협정문에 따른 농산물 자유무역에 관한 이행조치들은 2004년에 모두 끝났다. 선진국 지위를 받은 나라는 2000년에, 개발도상국 지위를 받은 나라는 2004년까지 자유무역 및 시장개방을 위한 국가별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였다.

농업협정문은 UR에 따른 농산물 자유무역 조치 이후에 추가적이고 새로운 의무이행에 관한 자유무역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라운드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라운드에서 새로운 국제무역 규범을 만들고, UR보다 더 확대된 농산물 시장개장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TO는 당초 1999년에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

운 라운드는 당초 일정 보다 늦은 2001년에야 도하개발아젠다(DDA)라는 이름으로 겨우 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WTO는 DDA 협상을 2005년까지 끝낸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DDA 협상은 아직도 타결되지 않고 있다.

지금 WTO는 힘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WTO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DDA 협상은 2009년 이후부터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일괄적으로 DDA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벌였던 '포괄적 협상 및 타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에는 합의가 가능한 분야별로 부분적 협상 및 타결 방식으로 바뀌었다.

지금 WTO는 사실상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WTO는 기존 UR 농업협정문에 따른 무역규범을 관리하고, 무역분쟁을 중재하는 역할 정도만 수행하고 있을 따름이다. 원래 목표로 했던 추가적이고 새로운 자유무역 규범은 만들지 못하고 있다. DDA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 WTO의 힘이 그만큼 약화된 것이다.

DDA 협상이 장기 표류하면서 모든 WTO 회원국들은 현재 현상유지(standing still) 상태를 취하고 있다. 즉, 선진국은 2000년의 시장개방 수준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은 2004년의 시장개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DDA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농산물 자유무역을 확대할 새로운 국제규범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농업협정문에 따른 시장개방 수준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2014년 쌀시장을 관세화로 추가 개방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농민들이 "한국도 현상유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DDA 농업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을 매우 낮게 전망하고 있다. 왜냐하면 가장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의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DDA 농업협상의 최대 쟁점은 소위 '보조금의 불평등'의 문제이며, 이 사안에서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수출 선진국 그룹과 인도를 대표로 하는 개발도상국 그룹이 15년 이상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개발도상국 그룹은 미국과 EU 등 선진국이 수출보조금을 비롯하여 거대 규모의 보조금을 농업분야에 지급함으로써 농산물을 싸게 수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농산물 덤핑 수출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 그룹은 선진국이 농업분야 보조금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미국과 EU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UR 농산물협상을 주도했던 미국과 EU는 자국 농민과 농업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허용 조항들을 확보했지만 협상에서 주도권을 갖지 못했던 개발도상국들은 UR 농업협정문에서 자국에 유리한 보조금 조항을 확보하

지 못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보조금 전반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3) WTO 수레바퀴를 완전히 멈출 수 있을까

'보조금' 문제를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첨예한 의견대립은 매우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을 대표하는 인도의 경우 2013년 발리 각료회의와 2015년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조금 색다른 해법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주로 인도 국내의 상황과 맞물려 있는 해법이며, 인도는 개발도상국 그룹의 지원을 배경으로 선진국을 압박하고 있다.

인도는 지난 2013년 국민식량보장법(NFSA, National Food Security Act)을 제정한 바 있다. 국내 빈곤층을 비롯하여 전체 인구의 약 68%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쌀, 밀 등 기초 식량을 무상에 가까운 싼 값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국내 농민으로부터 기초 식량을 수매하여 정부 창고에 비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도 정부가 농민에게서 수매하는 가격과 약 68% 국민에게 공급하는 가격에는 차이가 존재하며, 이 부분은 WTO의 보조금 규정에 연관되어 있다. 인도 정부가 추정하는 연간 약 190억 달러(약 20조원 규모)의 보조금은 인도에 허용된 보조금 한도를 훨씬 더 초과하는 것이다. 인도는 이 문제를 선진국의 보조금과 연계하여 선진국을 압박하고 있다. 즉, UR/WTO 체제 출범 당시 선진국에 비해 인도는 보조금 문제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았고, 이 때문에 인도에 허용된 보조금 한도가 너무 턱없이 낮게 정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식량보장법을 시행하기 위해 인도 정부가 지출해야 하는 농업 보조금 규모가 WTO가 정해 놓은 금액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인도는 국민식량보장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보조금 규모가 WTO 관련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다른 회원국들이 이를 문제 삼지 말 것을 요구했고, 이 부분이 미국, EU 등과의 협상에서 받아들여져 '2013년 발리 패키지'가 도출될 수 있었다. 발리 패키지의 평화조항으로 불리는 이 합의에 따라 인도의 농업보조금이 WTO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다른 회원국들이 제소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평화조항은 4년의 시한을 갖고 있는 불완전한 합의라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즉, 4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금 인도의 보조금 문제가 제소 및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도 정부는 4년의 시한을 없애고 항구적으로 보장할 것을 새로이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과 EU 등은 인정할 수 없다며 대립하고 있다. 이에 인도는 미국과 EU 등 농산물 수출 선진국이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도 현행 보다 훨씬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든지, 아니면 선진국이 보조금을 철폐하든지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도는 이 문제를 식량주권의 차원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번 나이로비 각료회의에는 유엔 특별보고관이 참석하여 연설을 통해 식량권을 강조함으로써 인도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 주었다. Hilal Elver(식량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Food)는 개발도상국이 식량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사항은 WTO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멈출 수 있는가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기존 UR/WTO 체제의 농업협정문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회원국들은 협상을 통해 새로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한국이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약 40만 9천 톤에 달하는 쌀의 의무수입물량을 철폐하거나 감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쌀 시장이 관세화로 전환된 이후에도 WTO 농업협정문에 따라 막대한 양의 쌀을 매년 의무수입물량(TRQ)으로 수입해야 한다. 다른 회원국들은 관세화로 인한 조치 혹은 관세화 유예로 인한 조치 가운데 한 가지 의무만을 이행한 상태인데, 유독 한국과 일본은 관세화로 인한 조치와 관세화 유예로 인한 조치와 같은 두 가지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무이행의 불공평한 문제를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WTO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것이 쉽게 해결될 사안은 아니지만 동시에 불가능한 사안도 아니다. 정부 차원의 국제 공조와 협력, 농민단체간 국제 연대와 공동행동, 그리고 정부와 농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쌀의 의무수입물량을 철폐하거나 대폭 감축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보조금 협상 결과에 따라 그동안 농민운동이 요구해 왔던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의 경우에도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선진국 그룹과 개발도상국 그룹 사이에 보조금 문제를 둘러싸고 타협이 이루어질 경우, 개발도상국의 보조금 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할 수도 있고, 선진국의 보조금을 대폭 감축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에도 한국에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만약 보조금 한도가 대폭 상향조정될 경우 가격지지 정책과 소득지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상한선이 대폭 확대되면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선진국의 보조금이 철폐되거나 대폭 감축될 경우 미국, EU, 호주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산물의 가격이 그만큼 상승하기 때문에 국내 농산물의 가격차이가 그

만큼 줄어들게 되고, 국내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4) FTA 수레바퀴를 멈출 수 있을까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지난 2002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미국, EU, 중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주요 농산물 수출 강국들과 잇따라 FTA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지금 TPP 신규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FTA의 수레바퀴를 멈추는 가장 우선순위는 TPP 가입을 막는데 있다. 일본과 미국의 의견대립으로 지지부진했던 TPP 협상 2015년에 완전히 타결되었다. 현재 기존 12개 회원국은 자국 의회의 비준을 받은 후 2017년 1월 1일부터 협정문을 발효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어느 시점에서 TPP 가입을 공식 선언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올해 내에 TPP 가입을 위한 공식절차를 '통상절차법' 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신규 회원국으로 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협정문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농산물의 관세철폐 및 감축에 관한 사항은 미국 등과 맺은 FTA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비관세장벽으로서 수입위생검역조건, GMO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FTA 보다 더 높은 개방수준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TPP 가입에 따른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TPP 협정문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 보다 더욱 심각한 위협은 소위 가입비(입장료)라고 불리는 것이다. 한국이 TPP에 신규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12개국과 각각 양자협의를 거쳐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상대방 국가의 동의를 얻는 대가로 입장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입장료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미국에게 지불해야 할 쌀의 추가개방이며, 이외에 쇠고기의 추가개방, GMO에 대한 규제완화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리고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해제, 칠레산 391개 농수산물 품목 추가개방, 호주 및 베트남의 추가적인 쌀 개방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FTA 수레바퀴를 멈추기 위한 최우선 순위는 TPP 신규 가입을 막는데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응책으로 FTA에 대한 종합적인 피해영향 분석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FTA를 체결한 나라이지만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종

합적인 피해영향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껏해야 국회비준 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개별 대책밖에 없다. 그러나 동시다발적 FTA 체결 및 발효 국면에서 개별 대책은 피해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아니고, 실효성 있는 대책도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FTA로 피해를 입은 대표적 품목 가운데 하나가 포도이다. 칠레와의 FTA로 인해 칠레산 포도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포도생산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고, 여기에 미국과의 FTA 발효 이후 미국산 체리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포도 소비를 대체함으로써 국내 포도생산 농가들이 피해를 당했다. 즉 칠레와의 FTA로 인한 포도 수입 증가와 미국과의 FTA로 인한 체리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포도생산 농가들이 피해를 당한 것이다. 그러나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연구와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미 수많은 FTA가 발효되어 동시에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기존 관세감축 대상 농산물의 관세 감축 폭이 더 커지고, 보다 더 민감한 주요 품목들도 점차 관세감축 및 철폐 대상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다. 동시다발적 FTA로 인한 관세감축 및 철폐 대상 품목도 확대되고, 관세도 대폭 낮아지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피해와 연쇄적인 간접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FTA로 인한 국내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처럼 개별 FTA에 대한 피해분석으로는 이미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피해대책 역시 비현실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모든 동시다발적 FTA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피해영향 분석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피해대책 역시 종합적이며 입체적이어야 한다.

농업 · 농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선택

1) 식량주권의 키워드, 쌀과 백남기

2015년 농업의 현실을 상징하는 두 단어는 '쌀' 과 ' 백남기 '였다. 그리고 그것은 2016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2015년 시작과 동시에 쌀 시장이 관세화로 전면 개방되었다. 누구든지 관세만 부담하면 쌀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게다가 쌀 재고가 많아서 쌀값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밥쌀 수입을 일방적으로 강행해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쌀값 보장과 밥쌀 수입 중단을 절규하던 백남기 농민에게 경찰이 물대포를 쏘아 쓰러지게 만들었다. 아직까지는 정부는 살인적인 폭력진압에 대해 사과 한 마디 없으며, 살인진압의 책임자인 경찰청장은 오히려 농민들을 향해 사법처리를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20년 이상 계속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은 빠르게 몰락해 왔고, 이제 그 마지막은 남은 '쌀' 마저 벼랑위에 서 있다. 마지막 남은 쌀이라도 살리기 위해 노구를 마다하도 아스팔트에 서서 온몸으로 호소하던 고령의 농민 '백남기' 는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쌀' 과 '백남기' 는 2015년 농업이 처한 현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 이다. 쌀은 곧 백남기이며, 백남기는 곧 쌀이다.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2016년에도 그 상황은 이어진다. 정부는 2015년 수확기 쌀값 대책으로 20만 톤 정도를 수매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그 정책은 쌀값을 예년과 같이 80kg 1가마당 17만 원으로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쌀값이 일시적으로나마 15만 원 이하로 더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농민들은 쌀값의 회복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시장격리 대책을 주문했지만 정부는 일시적인 하락 방지 대책만 제시한 것이다. 이런 땜질식 처방 때문에 과잉재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2016년에도 여전히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올해 쌀 정책의 주안점을 발표하면서 쌀값 회복은 언급도 하지 않고, 그 대신 쌀 재배면적을 줄여 쌀 생산을 감소시키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었다.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 쌀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쌀 생산이 줄어든다면 2017년부터 쌀값은 조금씩 올라갈 수 있지만 쌀 자급률과 식량자급률은 크게 하락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자급률이 낮아지면 정부는 다시 쌀 재배면적을 늘리고 쌀 생산을 독려할 것이며 쌀값 폭락은 또 다시 나타날 것이다. 쌀값과 식량자급률의 악순환이 앞으로도 여전히 반복된다는 것이다.

쌀값과 소득 그리고 식량주권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근본적인 대책과 일관성 있는 추진을 갖출 수 있다면 수급조절, 생산조정, 가격안정, 소득보전 등의 측면에서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개입을 통해 쌀값과 식량주권의 딜레마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쌀은 국민의 주식(主食)이다. 비록 국민의 식생활 패턴이 변화하고 1인당 쌀 소비가 감소하여 국민 식생활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쌀이 주식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쌀을 대체하는 새로운 주식이 나오지 않는 한 쌀이 주식이라는 사실은 장기적으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명제가 될 것이다.

또한 쌀은 우리 농업의 중심이다. 비록 돈으로 환산한 농업생산액 측면에서 쌀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지만 단일 작목으로는 여전히 농업생산가치가 가

장 높고, 가장 많은 농민이 쌀농사를 짓고 있으며, 쌀 재배면적이 절대적으로 많다. 특히 식량주권 혹은 식량안보 측면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 측면에서, 통일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전체 농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쌀의 기능과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쌀 자급기반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하였고, 특별히 쌀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래서 지난 20여년에 걸친 농산물 시장개방과 농업구조조정의 광풍 속에서도, 농업 · 농촌 · 농민이 빠르게 몰락하는 과정 속에서도 적정수준의 쌀 자급기반을 겨우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쌀 시장 전면개방은 쌀 농업의 불확실성을 높여 쌀 농민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다. 게다가 쌀의 추가개방 여부와 관련한 통상협상이 진행되거나 예정되어 있어서 불확실성 및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의 밥쌀 수입을 둘러싼 농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반발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추곡수매제도 폐지 이후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쌀의 실질소득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성이 높은 다른 작목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쌀의 자급기반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소득성이 높은 작목으로의 집중에 따른 밭 농업의 가격불안도 높아지고 있다.

결국 쌀시장의 관세화 전환 및 추가개방 가능성에 따른 쌀 농업의 불확실성 및 농민의 불안감 증대와 아울러 쌀 소득의 지속적인 하락추세가 이어지면서 쌀 자급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최근 논란이 되고 밥쌀 수입 문제와 쌀값 폭락 우려가 더해지면서 쌀 자급기반의 붕괴마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적정수준의 쌀 자급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외적으로는 추가개방의 여지를 제거하여 불확실성 및 불안감을 해소해야 하며, 둘째, 대내적으로는 쌀 소득보전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쌀 소득보전을 위해서는 현안인 쌀값 폭락의 우려를 해소하고, 현행 쌀 소득보전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쌀 소득을 보전하는 것은 밭 농업으로의 작목전환 현상을 억제하거나 완화시켜 밭 농업의 생산 및 가격 안정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이상과 같이 쌀과 식량주권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가장 시급한 단기적인 처방은 첫째, 밥쌀수입 중단, 둘째, 대북 쌀 차관 재개, 셋째, TPP 등 쌀의 추가개방 중단 등이 핵심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첫째, 쌀 의무수입물량(TRQ) 철폐 및 감축 추진, 둘째,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의무수입물량(TRQ) 종합 관리방안 마련,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셋째,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 개편, 넷째, 쌀의 전국단위 경제사업체 조직, 다섯째, 공공급식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한 쌀 소비촉진의 실효성 제고 등이 중요하다.

2) 지속가능성의 토대 만들기, 가격안정과 소득보전

정부의 농업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은 농민의 삶의 질과 살림살이가 될 것이다. 즉, 농민의 삶의 질이 이전에 비해 개선되고,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면 부분적인 문제점들은 제쳐두고서라도 전반적인 농업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대로 농민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졌다면 부분적인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농업정책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농업과 농촌이 지속적으로 몰락해 가고 있고, 회생의 기반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민의 삶의 질과 살림살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박근혜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와 같은 전반적인 평가는 무시하고 부분적인 정책 몇 가지를 제시하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화자찬하는 모습들을 보여 왔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 할 수 있다.

시장개방과 구조조정 때문에 대다수 농민의 삶의 질과 살림살이는 더욱 악화되었다. 도농간 소득격차, 농촌의 양극화, 농민의 빈곤화는 더욱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농업정책은 이 문제를 완화하거나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확대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소수의 부농 및 대농을 제외한 대다수 중소 가족농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특히, 대도시와 수출산업 위주의 성장전략을 고수하는 경제정책 때문에, 재벌과 대기업에 더욱 많은 혜택을 주는 분배정책 때문에 농촌과 농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경제민주화 및 복지정책의 확대 등과 같은 공약은 사실상 폐기된 가운데 전반적인 재정능력의 한계 때문에 도시와 농촌의 삶의 질 격차를 줄이기는커녕 더욱 확대시키는 역주행이 이어지고 있다.

농업과 농민을 지속 불가능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문제는 소득의 문제이다. 농가소득은 지난 2005년 이후 최근 10년간 대체로 3천만 원 ~ 3천4백만 원 정도에서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대표적인 가격지지정책으로서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된 이후 농가소득의 정체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농가소득 가운데 농사를 지어서 벌어들이는 농업소득의 장기 침체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1995년 이후 약 20년간 농업소득은 대체적으로 약 1천만 원 수준에서 멈춰 있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의 장기 침체는 농가부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2005년 이후 농가부채 총액은 큰 변동이 없지만 그 대신 농가부채에서 생산성 부채가 줄어들고 소비성 부채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농업의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생산적 투자는 감소하고, 그 대신 부족한 소득 때문에 가계의 생계유지 및 생활영위에 필요한 돈을 빌리는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빚내서 살아가는 인생이 농민의 삶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농업과 농민의 지속가능을 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가의 소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농가의 소득에 직접 관련된 핵심정책이 가격정책과 소득정책이다. 따라서 가격정책과 소득정책은 농업정책의 알파요 오메가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농업정책에서 가격정책과 소득정책은 서자처럼 취급받고 있다. 오히려 수출농업, 6차 산업화, ICT 융복합 스마트팜, 고품질 브랜드화 마케팅 등과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 정책들의 필요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런 정책들은 개별 농가(경영체) 단위에서 자기 책임과 경영계획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도 동시에 개별 농가(경영체)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 정책들은 대다수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정책이 아니라 차별화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개별 농가(경영체)의 경영전략을 지원하는 틈새정책 혹은 부가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가적인 틈새정책은 어디까지나 농정의 기본이 제대로 작동하는 토대위에 부가적으로 추가될 수 있는 정책이지만 정부는 마치 이것이 정책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농업정책의 최대 과제는 농정의 가장 기본이 가격정책과 소득정책을 제대로 구성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취약한 가격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농정의 기본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농업정책은 가격정책과 소득정책을 균형 있게 병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농업정책은 과거에는 추곡수매제도로 대표되는 가격정책 위주로 운영되다가 2005년 이후에는 가격정책이 사실상 무기력하게 되고 직접지불제도로 대표되는 소득정책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가격정책과 소득정책 가운데 하나만을 취사선택하여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농업정책의 심각한 불균형이 농가의 살림살이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의 장기 침체는 직접지불제도와 소득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소득정책과 아울러 가격정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균형 있게 시행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농가의 소득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농가의 살림살이를 개선할 수 있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농산물 가격정책은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는 최저가격으로 최소한의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농산물 가격정책을 통해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접근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접근방법은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한 후에 사후적으로 가격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인데,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 가운데 변동 직접지불이 여기에 해당하고, 중앙정부가 농안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 역시 여기에 해당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도 여기에 해당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접근방법은 농산물의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폭락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가격안정장치를 운영하는 방식인데, 현재 국내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가 여기에 해당하는 방식이다. 참고로 국내에서는 생협의 가격정책이 이 방식과 유사하며, 선진국에서는 품목별 협동조합을 통한 가격안정장치가 사회적으로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가소득의 구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농업소득이 1995년 이후부터 장기간 정체 내지 감소 상태에 빠져 있고,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농업소득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정책수단은 농산물 가격정책이기 때문에 현행 농산물 가격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개편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중앙정부의 농산물 최저가격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가격정책의 출발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최저가격제도의 대상품목을 현재 7개 품목에서 약 15~20개 정도의 기초농산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 둘째, 최저가격을 직접생산비나 경영비를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생산비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최소한 생산비는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현재와 같이 약 10% 내외의 계약재배 정도로는 가격안정 기능을 거의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품목별 계약재배를 품목별 생산량 및 재배면적의 절반 이상이 되도록 대폭 확대해야 한다. 넷째, 현재와 같이 품목별 농가 대표성이 매우 취약하고, 정부의 들러리 기능에 머물고 있는 위원회를 실질적인 권한과 대표성을 갖춘 새로운 거버넌스 형태로 재편해야 한다.

결론에 대신하여

농업과 농민의 지속가능을 위해, 그리고 먹거리와 밥상의 지속가능을 위해 시장개

방의 수레바퀴를 멈추기 위한 노력과 아울러 국내 농업정책도 새로운 선택이 필요한 임계치에 도달해 있다. 지금까지와 같은 구조조정 위주의 농업정책으로는 더 이상 농업과 농민 그리고 밥상과 먹거리의 지속가능을 담보할 수 없음은 명확하다. 구조조정을 폐기하고 지속가능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농정방향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정착시키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공론을 모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 첫 걸음을 어디에서 내디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글은 그 실마리를 쌀과 소득에서 찾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패러다임을 기초를 쌓기 위해 우선 당면한 문제 해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6 새사연 전망 보고서 목록

날짜	분야	제목	작성자
1월 12일	고용·노동	노동시장, 유연화보다 소비확대가 우선이다	새사연 노동연구팀
1월 15일	부동산	2016 부동산시장은 '위험한 균형' 유지할 것	권순형
1월 18일	정치	야당은 왜 존재하는가? : 2016년 정치전망과 야권의 과제	손우정
1월 25일	농업	농업의 지속가능성, '쌀'과 '소득'에 있다	장경호
1월 28일	주거	추후 공개	추후 공개
2월 1일	돌봄	추후 공개	추후 공개
2월 4일	의료복지	추후 공개	추후 공개
2월 8일	청년	추후 공개	추후 공개
2월 11일	경제	추후 공개	추후 공개
2월 15일	미디어	추후 공개	추후 공개
2월 18일	종합	추후 공개	추후 공개